

“이슬람 파시즘” 과 교황 망언
6, 7, 10면

한미FTA 반대 운동의 방향
1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테러와의 전쟁’ 5년 3면
조너선 닐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 중인 부시 4면

국제 소식
■ 대만 천수이벤 퇴진 투쟁 16면
■ 〈한겨레〉한승동 기자 인터뷰 -
일본 아베 정권의 전망 11면
■ 멕시코 민중항쟁 10면

13호 2006년 9월 23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9.23 반전행동
특별 증면호



자이툰 즉각 철군하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부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진통이 있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군사 지원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실제 파병 한국군은 미국이 벌이는 학살 전쟁의 충실한 도우미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파병 재연장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평화·재건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완전한 사기극이었다. 2005년 자이툰 전체 예산 중 “재건 비용이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재건

비용 가운데 “50퍼센트가 제르바니(쿠르드족 민병대) 여단 기지 신축, 수사장비, 시설경비 장비”에 쓰였다.(<한겨레21> 626호)

최근까지 자이툰은 “하는 일 없이 기지 안에서 삼질만 해” 왔다. 한 이라크 파견군무 경험자는 “공병대의 주임무가 부대 내부공사와 외부에 발주한 공사의 준공 검사”뿐이라고 증언한다. 의료부대도 마찬가지다. “2005년 5월 에르빌 시내 폭탄테러 당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수용 능력 부족을 이유로 단 1명의 부상자만 받았다.”(<한겨

레21> 627호)

이라크 저항에 밀려 미국의 ‘동맹군’들이 속속 철군하는 지금, 자이툰의 임무는 되려 엉뚱한 방향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자이툰은 유엔이라크재건기구(UNAMI) 아르빌 사무소 경비 임무를 맡고 있다. 또, ‘요인경호’ 임무도 증가하고 있다. 이라크 점령 도우미 구실을 강화하는 것이다.

》 3면에서 계속



이라크 점령 종식/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평택 미군 기지 확장 반대

9.23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

9월 23일(토) 오후 3시 / 서울역 광장/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www.antiwar.or.kr



인용해도 될까요?

“사회주의는 소멸되지 않았다. 다만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이제 사회주의가 부활할 때가 됐다.”

— 우고 차베스

“블레어는 살인 행위에 가담한 자인데, 그를 나와 우리 가족에게 데려와서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었다고? … 이런 행위는 … 우리를 모욕하고 배신하고, 도발하려는 시도 … 레바논 정부의 주장과 그와 연계된 정치세력들이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 블레어를 초대한 레바논 총리 시니오라를 비난하는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이 땅에서 테러를 완전히 예방하고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 지지의 입장을 전한다.”

—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에게 아부하는 노무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국가 시설물인데, 이걸 국방위원들이 조사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 국정감사 대상인 군부대에서 골프를 쳐놓고 ‘시설 점검’했다고 우기는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열우당은] 선거를 위해 급조된 … ‘잡탕정당’[으로] … 70퍼센트의 기회주의자와 10퍼센트의 ‘포라이’와 20퍼센트의 비교적 관참은 이들이 있을 뿐이다.”

— 노무현의 ‘경제 가정교사’였다는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유종일

“싸발놈들, 밟아버려. 윤영규(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라 그레. 밀살야함 … 우린 그런 거 안해, 개새끼들아.”

— 야합에 분노한 노동자에게 뺨 맞은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침략동맹에 맞선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9월 13일 새벽, 노무현 정부는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가옥 강제 철거를 감행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 주려 했는지, 노무현 정부는 90채 가량의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1만 8천 명이나 동원해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의 군사 패권 강화 전략인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견된 미군을 공격형 신속대응군 체제로 변경하고 있다.

한국에 불박이로 있던 대규

모 미군기지도 단순한 대북 전쟁 억제 구실을 넘어, 동아시아 세계를 무대로 미국의 패권 추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동성 높은 군대로 재편하려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이와 같은 미군기지 재편 시도의 일환이다.

하위 파트너

노무현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적극 나서는 것은 미국의 공격적 군사 전략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벌써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의 철거에 항의하는 주민들

따라서 강제 철거에 좌절하지 말고, 침략동맹으로 거듭난 한미동맹에 맞서는 운동을 꾸준히 건설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강제 철거 당일 저녁, 5백여 명이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긴급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긴급하게 조직됐는데도 한총련 학생들과 민주노동당, 한국청년단체연합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자이툰 부대 철수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요구하는 9월 23~24일 이틀간의 시위를 협력해 규모 있게 조직한다면, 침략동맹에 맞선 운동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병호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난 9월 4일 새벽, 군 복무중이던 전 한양대 학생회 활동가 부진환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기무사에 끌려갔다.

공안당국은 이미 몇 년이나 지난 학생회 활동 당시의 경력을 문제 삼아 “이적 단체 가입, 회합·통신” 혐의로 부진환 씨를 연행했다.

이것은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을 통한 공격의 일부이다.

지난 7월에는 이미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문제 삼아 민주노동

당 이주희 학생위원장을 재기소했고, 황광민 조선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했다.

이적단체

8월에는 광주지역 민주노동당 전 당직자를 연행해 갔다가 무혐의 석방하는 일도 있었다. 8월 21일에는 대학 시절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한국민권운동연구소

의 최희정 연구원을 구속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이후 우파들의 좌파 마녀사냥 분위기가 시작했다. 우파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자료집’과 ‘선군정치 포스터’, 민주노동당의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 등을 문제 삼으며 사회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진보운동 단체를 마녀사냥하려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마녀사냥 분위기에 한껏 편승해 국가보

안법을 휘두르며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우파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노사관계로드맵, 이라크 파병 연장 등에 대한 반대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을 계속 휘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민주노총 지도부 일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파의 마녀사냥에 편승한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최미진

더럽힌 땅을 팽개치고 이사가려는 미군

얼마 전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15개가 반환됐음을 승인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둔하면서 오염시킨 토지와 지하수에 대한 환경 복구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대부분 기름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주변 토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이거나 각종 탄환과 화약 사용 때문에 생긴 중금속 오염 등 소량의 오염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지난 9월 8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당한 열우당 국회의원 우원식에 따르면, 반환된 “일부 기지의 경우 지하수 위에 떠 있는 기름[의 두께가] … 4미터 88센티미터로 거의 유전 수준”이다.

매항리사격장에서는 오염 정화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폭발 가능성이 있는 불발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섬 전체가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돼 있다.

1992년 미군기지가 철수하면서 아무런 환경 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필리핀의 수빅·클라크 기지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지역에서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부담

“오염자 부담 원칙”을 말하던 노무현 정부는 반환된 15개 기지를 포함해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반환된 기지를 포함해 환경조사가 끝난 29개 기지의 토양 오염(지하수 제외)을 정화하는 데 1천2백5억 원이 들 거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그 비용이 최고 2천6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하수 오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의 금액이 들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 중 극히 일부인 1백32만 평에 불과하다. 남은 30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모두 따지면 2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제도도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이 희생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가야 할 곳은 평택도 용산도 아닌 미국이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파괴한 주둔지의 환경 복구 비용과 피해보상은 미국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장호중

》 1면에서 계속

미국은 자이툰이 아예 이라크에 눌러 앉기를 바란다. 미국은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을 조직개편하며 자이툰을 여기에 편입시키려 한다. 이 개편은 “일종의 군사위원회 형식”이다. 만약 자이툰이 여기에 참가하면 자이툰은 “한 정부의 형식”을 갖게 되며 “정치교문·군사고문” 구실까지 하게 된다.

자이툰이 주둔하고 있는 쿠르드 자치구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최근 터키는 이라크 국경을 넘어 쿠르드 반군 근거지를 공습했다.

또,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KRG) 대통령 마수드 바르자니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 없이 독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갈등들은 아직 잠재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자이툰을 급속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점령 도우미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격렬한 저항의 늪에 빠지고 있는 미국을 계속 돕고 있다. 9월 14일 2백5명의 공병·의료 지원 부대 교체 병력이 “미국 등 동맹군에 대한 공병, 의료 지원”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다.

노무현은 동티모르와 레바논 파병도 검토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 때처럼 의료·공병 부대를 먼저 파병하는 수순을 밟겠지만 레바논 파병도 레바논의 평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동 전문가인 이희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이라크보다 더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에 총을 쏠 것인가? 무장해제를 거부하는 헤즈볼라 요원들을 향해 유엔 결의안 준수를 들먹이며 총부리를 들이댈 것인가?”

“이스라엘 침공 전에도 레바논에는 2천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존재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침공해 민간인 1천여 명을 죽이는 동안 평화유지군은 그저 방관만 할 뿐이었다.”(《시사저널》 882호)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자이툰 파병 연장 시도뿐 아니라 부시의 또 다른 전쟁들을 지원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최근 자이툰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9월 7일치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무려 77.5퍼센트의 사람들이 자이툰이 철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월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자이툰 철군안이 준비되고 있다. 반전 운동은 이런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조직할 필요가 있다.

한규한

‘테러와의 전쟁’은 끔찍한 아만과 함께 그에 맞선 세계적 저항을 낳았다

‘테러와의 전쟁’ 5년

평가와 전망

알렉스 캘리니코스

2001년 9월 11일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조지 W 부시와 그의 참모들은 그들이 테러리즘에 맞선 전 지구적 ‘장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여전히 강변한다. 이 말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9·11은 공화당 우파에게 그들이 찾았던 기회, 즉 미국의 세계 패권을 확고히 하는데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라크를 점령함으로써 중동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 과정의 핵심적 과제였다.

부시와 그 일당들이 전 세계에 걸쳐 시작한 이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은 물론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의 규모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

지금까지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사망자 수는 수백만·수천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이 여러 전선에 걸친 세계적 전쟁이라는 점은 미국 네오콘들의 지적이 맞다. [다만] 네오콘들의 문제는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 전선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힘을 회복한 탈레반은 공세에 나서고 있다. 멍청한 토니 블레어와 존 리드[영국 국방장관] 덕분에 미군을 돕기 위해 파병된 영국 군대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전역의 소규모 거점들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은 잘 무장하고 사기가 높은 게릴라들에게 포위돼 있다.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전선인 이라크에

서도 미국은 2003년 3~4월 침략 후 고작 몇 달 만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게릴라 단체들에 맞선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여기서도 역시 패배하고 있다.

최근 미 해병대의 정보책임자가 서부 요충지인 안바르 주(州)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한 육군 장교는 이렇게 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패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패배했다. 그리고 무릇 전쟁의 성패란 여기에서 결정되는 법이다.”

이 보고서를 폭로한 〈워싱턴 포스트〉는 9·11 5주년을 앞두고 부시가 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차대조표

저항세력 봉쇄를 위해 미 점령군은 분열 지배 전략을 채택했고, 사담 후세인 시절 박해받았던 시아파 무슬림 정치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것은 바그다드와 그 인접 지역에서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 간의 지독한 종파 간 살육을 조장했고, 이것이 이라크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또,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인접국인 이란의 영향력 강화라는 달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란의 이슬람주의 정권은 이라크의 미국 예속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시아파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팔레비 왕정을 타도한 1978~79년 혁명 이래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으뜸가는 적이었다.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리하게 되돌리기 위해 최근 몇 달 간 부시 정부의 유력 인사들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진해

왔다.

1970년 4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선을 확대하고 캄보디아를 침공했던 것처럼, 부시 정부도 스스로 기어들어간 이라크 수령에서 확전을 통해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

올 여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상대로 33일간 벌인 전쟁은 이러한 전략의 일부였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레바논의 이슬람주의 민족해방운동) 분쇄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미국은 이란의 핵심 동맹을 제거해 이란 정부를 고립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달 시모어 허시는 〈뉴욕거〉에 이렇게 썼다.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레바논 지하에 있는 헤즈볼라의 고도로 요새화한 미사일 기지와 지휘·통제 본부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이 성공하면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더는 한 편 향후 이란의 핵 시설 파괴를 위한 미국 선제 공격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정보 기관과 외교부의 전·현직 관리들이 내게 말했다.”

실제로는 레바논 민중의 끔찍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중·지상 작전은 실패했다. 이것은 1948년 국가 수립 이후 이스라엘이 겪은 최초의 군사적 패배였다. 이것은 또한 부시 정부의 패배였다.

따라서 장기 전쟁의 대차대조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사상 최강의 군사 강국이 모든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들은 부시 일당을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이란 공격 계획을 강행할 수 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반전 운동을 계속 건설해야 한다.

〈맞불〉 창간을 축하하며

“지금까지 ‘다함께’가 반전 평화 운동에 선도적 구실을 해 왔습니다. 그 공로는 지대합니다. 〈다함께〉의 성과를 바탕으로 〈맞불〉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영국군·미군·나토군이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9·11 직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다. 당시 미국은 지상군 투입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탈레반과 싸우고 있던 부족 집단들인 북부동맹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23년 동안 내전과 옛 소련의 침략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죽고 1백만 명은 불구가 됐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상이나 이슬람주의 저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양측 지도자들이 모두 엄청나게 잔혹하고 탐욕스럽게 행동한 탓에 거의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오로지 생존에만 매달렸다.

그래서 탈레반을 위해 싸우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북부동맹의 군대도 싸우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엄청난 폭격을 퍼부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카불을 장악할 수 없었다.

2001년 말에 미국, 파키스탄 정보부, 탈레반은 협정을 맺었다. 탈레반은 카불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탈레반 지도자들은 모두 남부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파키스탄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협정은 준수됐다. 미국은 카불에 정부를 수립했고, 칸다하르 근처의 파슈툰족 출신으로 한때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카르자이가 이 정부를 이끌었다.

당시 많은 논평가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오랜 저항의 역사를 지닌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거의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무엇보다도 평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규모 재건 사업이 추진될 거라는 약속도 받았다.

그러나 [재건 사업에] 배정된 돈은 거의 없었다. 정부 각료들은 썩을 대로 썩었다.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분노케 한 것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들과 구호단체들에도 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이다.

카불의 주택은 대부분 내전 기간에 파괴됐다. 빈민들은 여전히 폐허 속에서 잠을 잔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 구호단체의 활동가들에게 집세로 월 3천 달러(약 2백90만 원)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아프가니스탄의 평균 임금은 하루 5달러(약 4천 8백 원)밖에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점령군과 구호 활동가들의 오만함에 대한 증오를 키우며 4년 동안



9월 8일 카불 미 대사관 부근에서 벌어진 자살폭탄 공격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조너선 닐은 19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았고 그 뒤 오랫동안 그 곳 상황을 추적해 왔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식통들과 미국·영국·파키스탄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 글을 썼다.

인내했다. 2001년에 탈레반은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점령에 맞선 저항을 호소하는 조직된 정치 세력이 탈레반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남부에서 싸우고 있는 탈레반 부대들은 괴이한 광신도들이 아니다. 그들은 무기를 든 지역 주민들이다. TV에서 4백 명의 탈레반이 살해됐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남부노소 지역민들이 엄청난 폭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통제 불능

남부의 칸다하르는 제2의 대도시이자 탈레반의 근거지다. 지난 몇 주 동안 나토 산하 캐나다군은 칸다하르 서부 근교에서 저항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왔다. 지금 탈레반은 교외 일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더는 게릴라 전쟁이 아니다. 저항세력은 소총과 기관총, 대전차로켓발사기(RPG)

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포스팅어미사일 — 파키스탄에서 들여온 지대공 미사일로 헬리콥터나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 — 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헤로인 제조용 양귀비를 재배해 얻은 돈이 이런 무기들을 사는 데 쓰인다. 탈레반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양귀비 재배가 금지됐다. 이제 빈농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고, 카르자이 정부의 관리들이 그 거래에 깊이 연루돼 있다. UN 대변인이 뭐라고 말하건, 양귀비 재배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칸다하르와 카불의 중간쯤에 있는 가즈니 주에서는 지금 대규모 탈레반 부대들이 출현하고 있다. 또, 지금 저항세력은 북동부의 코나라 주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데, 1980년대에 옛소련은 이 곳에서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다.

파키스탄의 상황은 훨씬 더 통제불능이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

이의 동부 접경지대에는 긴 산악지대가 있다. 국경 양쪽에 살고 있는 파슈툰족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사실상 어떤 정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내 왔다.

1백20년 동안 이 곳 저항운동의 중심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의 와지리스탄 지역이었다. 2002년 이후 파키스탄 군대는 북와지리스탄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시도해 왔는데, 이 곳은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다. 파키스탄 군대는 수백 명의 군인을 잃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을 살해했다.

와지리스탄

파키스탄 군대는 탈레반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왔고, 더는 싸울 태세가 돼 있지 않다. 9월 2일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언론이 ‘북와지리스탄 지역 탈레반’이라고 부른 세력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내용은 파키스탄 군

대의 전면 철수, 모든 군 검문소 폐지, 모든 탈레반 재산자들 석방, 압류된 무기와 차량 전부 반환 등이다. 파키스탄 정부가 살해한 모든 저항세력과 파괴한 모든 가옥과 재산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는 보상해야 한다. 외국 출신 전사들은 북와지리스탄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 대가로 와지리스탄 저항운동은 국경을 넘어 탈레반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다.

파키스탄 군대는 국경 양쪽 어느 곳에서도 전투를 벌이지 않고 있다. 탈레반은 안전한 은신처와 보급망을 확보했다. 지난 주에 그들은 와지리스탄 접경 지대의 아프가니스탄 쪽 영토인 파크티아의 주지사를 살해했다.

전망

북부동맹뿐 아니라 다른 정치세력들도 사람들이 점령에 진저리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남부로 가서 탈레반과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분열 지배 전략은 먹히지 않고 있다.

지금 나토는 인구 2천5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에 2만 명의 군대를 파병했다. 그들은 버틸 수 없다. 지금 나토군 야전 지휘관들은 상당 규모의 병력 증강이 없으면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국(과 폴란드)을 제외한 어떤 정부도 추가 병력을 보낼 용의가 없다. 정치인들은 그 곳에서 심각한 병력 손실이 있을 경우 어떤 정치적 결과가 있을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나토군 지휘관들은 칸다하르 자체에서 봉기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남부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의 공공연한 패배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영·미 정부는 팔루자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 공중 폭격을 가할 것이다.

그런 학살로도 승리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때문에 카불의 카르자이와 파키스탄의 무사라프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또, 그 때문에 수만 명이 죽을 것이다. 현대전에서 늘 그랬듯이 그런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가 될 것이다. 또, 궁지에 몰린 점령군이 대규모 이란 공습에 나설 수 있다.

부시를 살리기 위해 죽여가는 우리 병사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 평화운동의 의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학살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점령군은 철수하라!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슬람주의 저항 운동은 오늘날 가장 주요한 반제국주의 세력 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이슬람주의의 정확한 의미와 성격, 이슬람주의에 대한 좌파의 올바른 태도 등은 여전히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다.

이슬람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은 이슬람주의와 이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오늘날 13억 명이 믿는 주요 종교다. 반면,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바탕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 신념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이슬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모든 무슬림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슬람주의자다.

이슬람주의에 대한 흔한 편견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현대 세계를 거부하는 반동적 사상이고, 따라서 전통주의와 사회적 보수주의,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우파의 다수는 물론 좌파의 일부도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이슬람주의자들과 협력을 꺼리거나 심지어 맞서 싸워야 할 적으로 여기곤 한다.

예컨대, 프랑스 아탁(ATTAC)의 지도자인 베르나르 까쌍은 영국의 좌파들이 무슬림과 함께 리스펙트를 건설한 것을 두고 “좌파가 무슬림들과 협력함으로써 좌파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이슬람주의 운동에 일부 반동적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슬람주의 운동의 주된 성격은 아니다.

이슬람주의 운동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세에 아랍 세계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주의는 제국주의 — 그리고 자본주의 — 의 충격에 상처받은 사회에서 등장했다. 1757년에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벵골 지역을 장악한 이래로 서구 열강들은 무슬림 세계와 그 밖의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배 · 수탈 · 억압해 왔다.

‘쇄신’

그러나 이러한 제국주의 지배가 모든 사회 세력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제국주의의 영향력 하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대중의 다수는 빈곤과 불안정으로 내몰린 반면, 토착 지배계급들은 — 비록 불만이 없지는 않았지만 — 서방 강대국들의 후원을 받으며 막대한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은 섹스와 음주, 복장에 관한 종교적 계율을 거리낌없이 무시하면서도, 신자들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경건한 세력을 자처했다.

이슬람주의는 이렇듯 부패하고 억압적인 국가와 제국주의에 대한 도전을 함축하는 모종의 ‘쇄신’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사회의 특별한 재편을 주장했는데, 그 근거를 이슬람에서 가져와 이슬람의 언어로 제시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국주의 지배 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과거로의 ‘회귀’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슬람주의자들의 다수는 결코 기존 사회의 특징 일체를 거부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들은 현대 산업과 현대 기술 그리고 그 토대인 과학을 받아들인다. 사실, 이 점에서 이슬람주의는 ‘근본주의’가 아니라 ‘부흥주의’에 가깝다.

물론 이슬람주의가 처음부터 아랍 저항 운동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아니었다.

제3세계의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아랍 세계를 뒤흔든 급진화와 반제국주의 저항 물결을 이끈 것은 세속적 좌파 — 특히 아랍 민족주의와 공산당들 — 였다. 이슬람주의의 부상은 이러한 세속적 좌파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이끄는 데 실패한 것과 큰 연관이 있다.

아랍 민족주의는 이집트의 나세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7년 전쟁의 패배 이후, 그 운동을 기반으로 집권한 아랍 정권들은 제국주의와 세계 자본주의와 타협하는 쪽으로 급속히 나아갔다. 나세르의 뒤를 이은 사다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1970년대 내내 아랍 정권들은 일련의 긴축 정책들을 실시했다.

스탈린주의 전통에 충실하던 아랍 공산

당들은 ‘단계혁명론’을 고수하며 노동계급 독립성을 팽개친 채 좌파 민족주의(때로는 이슬람주의)에 용해되거나 결정적 순간 거듭 무능력을 드러냈다.

아라파트와 그가 이끈 민족주의 세력인 ‘파타’의 계속되는 타협과 부패에 신물이 난 팔레스타인 대중은 2006년 총선에서 이슬람주의 단체인 하마스에 투표했다.

모순

이슬람주의가 오늘날 아랍 반제국주의 투쟁의 가장 유력한 이데올로기로 부상했지만, 장래 이슬람주의 운동에 어떠한 위기도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실, 역사적 경험은 이슬람주의 운동이 성공에 근접할수록 그 근본적 모순 또한 분명히 드러났음을 보여 준다.

권력을 장악한 이란의 이슬람주의자들은 가장 세속적인 문제들(예컨대, 개인적 축재, 경제 개발 계획들)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분파 투쟁 — 흔히 종교적 수사들로 치장되긴 했지만 — 을 벌여 왔다.

1990년과 1991년 일련의 선거에서 승리한 알제리의 이슬람구국전선(FIS)은 대중에게 보수적 생활방식을 강요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에 반대했다. 1991년 5월 군부의 선거 무효화 위협에 직면한 FIS는 명망 추구하고 봉기 사이에서 오락가락했고,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분열했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은 사다트 암살 뒤 대규모 국가 탄압에 직면해 일종의 ‘이슬람 개량주의’로 변모(일부는 순전히 준(準)군사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왔는데, 정부가 협상을 통해 국법 체계에 샤리아(이슬람법)를 도입하기 시작하자 점차 정권과의 충돌을 피하려 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자신의 노동계급 기반의 불만을 표현하는 한편(예컨대,

이슬람주의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유력한 이데올로기로 부상했다

2001년에 사유화에 반대하는 주요 파업들을 이끌었다) 그러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애썼고, 이 과정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가로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더 강화돼 왔다.

이슬람주의 운동의 이러한 모순과 약점은 핵심으로는 운동의 계급적 기반과 관련이 있다.

이슬람주의나 이슬람주의자들을 획일적 사상이나 집단으로 묘사하는 주류 언론과 학자들의 설명과는 달리 이슬람주의 운동은 그 기반을 이루는 사회 집단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 착취자들의 이슬람주의와 빈민들의 이슬람주의는 강조점이 사뭇 다르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부흥주의적 · 정치적 이슬람을 지명하는 결정적 요소는 신(新)중간계급의 이슬람주의다. 근대화를 경험하고 현대적 교육을 받은 이 계층은 이슬람주의 운동의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진정한 토대다.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의 주된 기반이 중간계급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제국주의와 부패하고 무능한 아랍 정부들에 대한 반대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체제에 일관되게 저항하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그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 그들은 흔히 그러한 활동을 반동적인 방향으로, 즉 종교적 · 인종적 소수파들과 여성들을 겨냥하는 쪽으로 이끌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약점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이슬람주의자들과 기꺼이 협력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주의자들은 온갖 형태의 이슬람주의에서 완전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슬람주의를 지지하는 개인들을 진정한 급진적 투쟁으로 끌어당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애써야 한다.

김용민

교황의 이슬람 모욕 발언

부시에게 보내는 이란 공격 청신호

최일봉

로마 가톨릭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아나나다를 까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무함마드가 자기 가 설교하는 신앙을 칼로써 전파하는 등 단지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것들만 가져왔다”는 14세기 기독교 황제의 말을 긍정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이슬람을 모욕한 것이다. 2005년 4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되기 오래 전부터 그(요셉 라쟁어 추기경)는 보수 우익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의 후신인 교황청 신앙교리성(1965년에야 비로소 이 이름으로 기구명을 바꿨다)의 장관으로서 그는 1980년대 다른 종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아시아 사제들을 혹독하게 비난했다. 다른 기독교 종파들의 신앙이 “결함 있다”고도 말했다. 교황 즉위 직후에는 다른 종교와 대화 하겠다며 포용적 자세를 취했으나 이번에 이슬람 모욕으로 한낱 제스처였음이 드러났다.

그는 단지 터키가 무슬림 나라라는 이유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이슬람 모욕 발언을 한 것은 내 보기로 단지 이슬람에 대한 서방 지배자들의 왜곡된 견해를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냉정한 계산에 따른 것인 듯하다. 전 세계 베네딕트(분도) 수도회의 수장 노트커 볼프는 교황이 인용한 기독교 황제 마누엘의 말이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를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인즉 아흐마디네자드가 가져올 것은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것들”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시에게 보내는 청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

미국 국기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인형을 불태우고 있는 이라크 시위대

교황 베네딕토16세는 누구인가?

교황 베네딕토 16세인 요셉 라쟁어(1927년생)는 소년 시절부터 보수적이었던 듯하다. 십대 때를 회고하는 한 대목에서 그는 한 반나치 공산당원을 “인간 쓰레기”라고 불렀다. 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직자 중 하나로 파울하버를 언급한 바 있는데, 파울하버는 공공연한 나치 동조자였다.

청년 사제 시절 라쟁어는 바이에른 지역 가톨릭 교회의 정치 조직인 기독교연합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당은 나치에 대한 태도가 의심스러운 극우 정당이었다.

신학 교수 시절 라쟁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며 공창(公娼) 제도를 옹호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춘이 “필요악”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고양되던 1960년대 말 라쟁어는 반전 운동 참가 학생들을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하며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1960년대 동안 약간 자유주의적 경향을 보였는데, 학생·노동자·좌파 들의 운동이 고양되자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들면서 반동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교재판소장”(신앙교리성 장관은 실제로 계속 이렇게 불렸다) 시절 라쟁어 추기경은 브라질의 저명한 신학자 레오나르두 보프 신부의 미사 집전권을 박탈하는 등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자들에게 파문을 포함한 징계를 매기며 규율을 잡았다.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자들 마녀사냥에 도움을 준 당시 그의 보좌관은 칠레의 군사독재자이자 학살자인 피노체트의 측근인 소다노 추기경이었는데, 소다노는 현재 바티칸의 국무성 장관이다.

종교재판소

신앙교리성 장관은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 조사 책임을 맡는데, 라쟁어는 사건의 축소 은폐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일례로, 2001년 그는 모든 주교들에게 비밀 서한을 보내,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을 절대 비밀에 붙이고, 증거도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부터 10년 간 비밀로 해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성추행 피해자들의 변호사들은 이 지시가 경찰의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그는 여성의 사제 서품에 한사코 반대했고, 낙태, 피임, 자위행위, 인공수정, 줄기세포 연구 등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조차 반대했다. 또, 동성애자를 “객관적 장애인”으로 묘사한 바 있다.

라쟁어 신앙교리성 장관은 200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 존 케리에게 성체성사를 베풀지 말라고 미국 주교들에게 지시했다. 케리가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반면에, 그는 사형제도와 이라크 전쟁이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데도 부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2005년 4월 추기경들 사이에서 요셉 라쟁어가 교황 베네딕토 16세로 선출됐다. 이는 바티칸이 전통주의 노선을 변경

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천명한 사건이었다. 가톨릭 전통주의는 사회주의와 노동운동뿐 아니라 계몽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과학 등 근대적인 것은 무엇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다.

요셉 라쟁어 추기경은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장 총애 받는 부하로서 가톨릭 교회 최고위 기구 내에서 교황 다음으로 큰 권력을 행사했다.

교황 선출 당시 그는 오푸스 데이의 지지를 받았다. 오푸스 데이는 1928년 파시스트인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신부가 창립한 극우 가톨릭 단체다. 에스κρι바는 스페인 내전 때 히틀러를 “[혁명으로부터]스페인 교회의 구원자”로 추켜세웠다.

베네딕토 16세는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사회당 정부에 매우 적대적이다. 사파테로 정부가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고, 낙태법을 완화하고, 이혼을 더 쉽게 만들고, 공립학교에서 가톨릭 교리 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은 가톨릭 신자 공무원들에게 동성애자결혼법 집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발렌시아에서 75만 명이 참가한 제5차 세계가정대회를 열어 사회당 정부를 공격하고 프랑코 체제의 잔당들인 국민당을 지원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개신교 근본주의 지도자들과 우익 정당이 맺는 관계와 흡사하다.

‘전체주의’에서 ‘이슬람 파시즘’으로

냉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쌍둥이라는 이론이 개발됐었다. 냉전 종식 후 새로운 적이 필요해진 우파들은 ‘이슬람 파시즘’을 발견했다고 아난디야 바타차리야는 주장한다

조지 W 부시는 “이슬람 파시스트들과의 전쟁”을 운운한다. 그러나 중동의 이슬람주의 저항 운동들에 뭔가 ‘파시스트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이다. 이 점은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다니엘 벤저민은 이렇게 말했다. “지하드주의자들이 무솔리니나 다른 파시스트들이 발전시킨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부시와 블레어는 ‘이슬람 파시즘’이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운운하며 광범한 추상적 ‘가치’로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함으로써 사실상 세계 어느 곳이든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테러리즘이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들먹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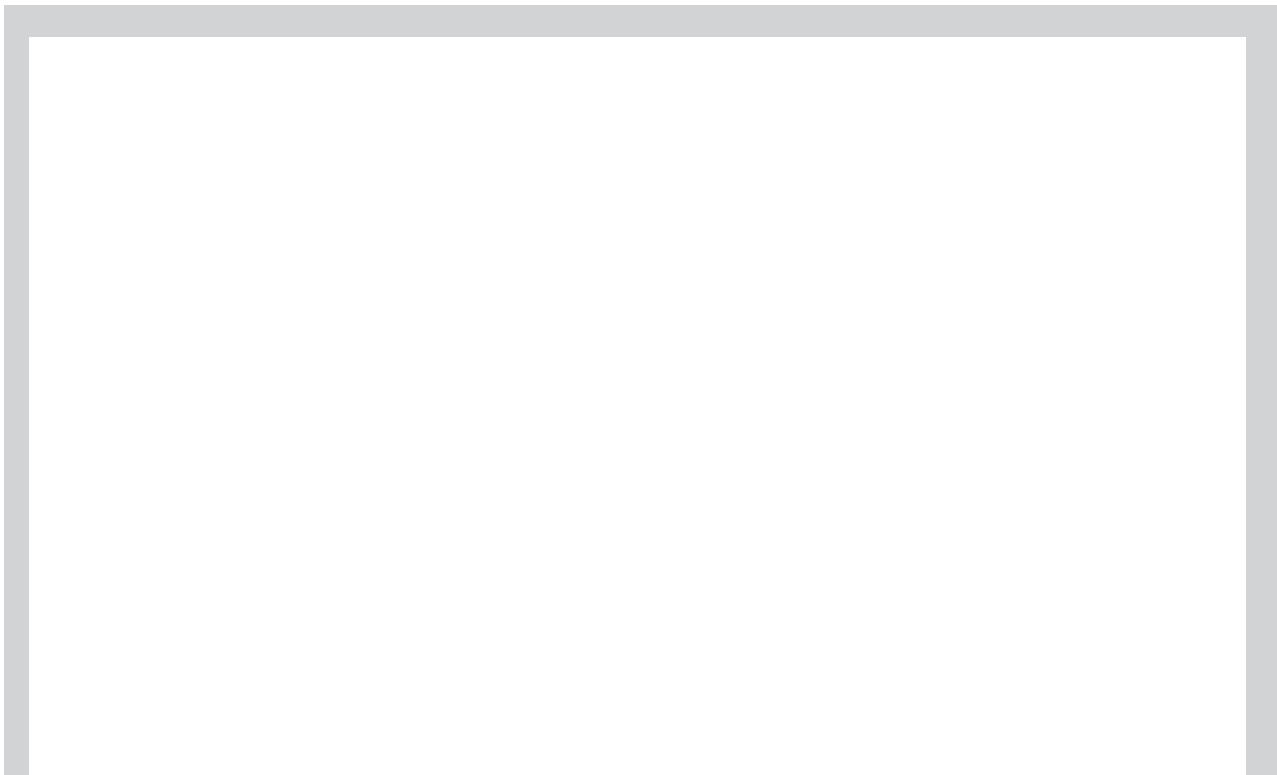
특히 블레어는 정치적으로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의 의미는 ‘자유무역’과 ‘이민 통제’를 뜻한다.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차이가 근본적인 정치적 차이라는 사상을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철학자 칼 포퍼였다. 그의 정치 이론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때 유명해졌고 냉전기에 우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유대계인 포퍼는 독일에서 나찌가 집권하자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도망가야 했다. 그는 파시즘에 반대했으나 맑스주의에도 광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결코 대립물이 아니고 실제로는 쌍둥이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모두 ‘닫힌’ 사회의 표본이고, 그 특징은 ‘전체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 ‘열린’ 사회이고, 따라서 극좌와 극우에 모두 반대한다.

미국과 서구의 지배계급들은 이 사상, 그리고 이와 관계 있는 ‘전체주의’ 이론을 열렬하게 옹호했다. 그런 사상과 이론은 외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개입과 국내의 정치 억압을 완벽하게 은폐해 주었다. 식민지의 해방 운동과 서구의 노동조합원들을 모두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자유의 적’으로 몰아세울 수 있었다.

포퍼의 ‘전체주의’ 이론의 중요한 특징 또 하나는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일부러 흐렸다는 것이다.[이것은 오늘날 ‘제3의 길’ 정치인들도 즐겨 하는 일이다.] 그 덕분에 서구 지배계급들은 필요할 때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좌파’적 색칠을 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는 파시즘과 똑같은 것이고, 좌파는 파시즘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좌파는 소련에 반대하는 미국을 편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



1950년대에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를 끌어 내기 위해 미사일 전시장 같은 행사에 대중이 동원됐다.(위) 그리고 대량 파괴 무기 모형들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보급됐다.(왼쪽)

의 논리였다.

이런 주장은 실제로 일부 극좌파에게도 먹혀들었다. 어빙 크리스틀 같은 사람들은 철저한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의 다른 경향들은 미국과 소련 가운데 하나를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B)을 창건한 토니 클리프는 양대 초강대국의 미사여구가 겹보기에 아무리 다르더라도 실천에서 그들은 모두 제국주의·자본주의 국가 구실을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둘 다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점

그러나 ‘전체주의’ 이론은 냉전기에 우파들에게 유용했음에도 중대한 약점이 있었다. 그 이론은 서구의 지배 엘리트들이 처음에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노동계급 운동을 막을 방파제로 여겨 환영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히틀러의 군사적 야망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협한 뒤에야 비로소 서구의 ‘민주주의자’ 엘리트들은 파시즘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똑같은 ‘전체주의’의 두 가지 변형일 뿐이라는 생각은 그런 사회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데는 아무 쓸모도 없었다. 사실, 소련은 냉전 이데올로그들이 묘사한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1980년대 말에 동유럽 정권들이 갑자기 무너졌

다. 갑자기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서방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못 되고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그래서 ‘전체주의’ 이론의 재판(再版)에서 공산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려는 우파들의 노력이 1990년대 내내 계속됐다. 지배계급에게는 그런 적이 필요했다. 분명히 그들의 제국주의는 1990년대에도 중단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이데올로기도 계속 필요했다.

새로운 ‘주적’

1979년 이란 혁명과 이후 이슬람 정권의 수립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적을 찾아내는 데 매우 유용했다. 그 뒤 20년 동안 많은 중동 사람들이 제국주의에 대해 이슬람주의 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런 사태 전개 때문에 미국의 우파 정치 이론가인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 충돌’ — 서구 기독교계와 다양한 적대 문명들, 특히 이슬람의 대결 — 이 냉전 종식 후 새로운 질서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점차 이슬람을 악마화하고 이슬람주의를 새로운 전체주의라고 묘사하는 주장은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자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다. 한때 괴짜 우파들만 사용했던 ‘이슬람 파시즘’ 같은 개념들이 갑자기 주류 지배층의 견해가 됐다.

그리고 냉전 때 그랬듯이,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슬람 파시즘’이 당장은 전문용어처럼 유행할 수 있지만, 지배계급 우파의 핵심 인사들은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영향력 있는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그이자 광신적인 반(反)무슬림 인사인 다니엘 파이프스는 부시가 ‘이슬람 파시즘’을 운운한 뒤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논평을 내놓았다.

“나는 모종의 이슬람으로 표적을 좁히려는 노력이 늘어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파시스트’라는 말이 잘못 쓰이고 있다. 파시즘과 급진 이슬람 사이에는 역사적 또는 철학적 연관이 거의 없다. ... 급진 이슬람은 역사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맑스-레닌주의와 훨씬 더 많이 연결돼 있다. ... 냉전기에 이슬람주의자들은 미국보다 소련을 선호했다. 오늘날 그들은 강경 우파보다는 강경 좌파와 더 깊고 더 많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의 연설을 자세히 읽어보면 블레어도 파이프스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8월 블레어는 급진 이슬람이 “혁명적 공산주의와 똑같은 특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다시 불붙인 냉전적 미사여구는 전 세계 인간 해방이라는 위협 — 평등과 연대의 원칙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 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듯하다.

..... 파시즘에 대해서는 10면에 실린 ‘파시즘이란 무엇인가’를 보시오

반(反)시온주의는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마이클 로젠

우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논 등을 얘기할 때 반시온주의나 유대인 혐오 등의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개념 정의를 소개한다.

● 유대교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켜지는 종교다.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유대교를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흔히 “세속적 유대인”이라고 한다.

● 시온주의는 이스라엘 국가를 창건한 정치 신념이다.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모국”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모국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시온주의자인 사람들도 많다.(서방 각국 정부의 대다수 인사들이 그렇다.)

더욱이, 그 신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실질적·객관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 꽤나 명백하다.

이스라엘

● 반시온주의는 이스라엘 국가를 창건하고 오늘날 그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을 반대하는 정치 신념이다.

●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을 순전히 종교나 정치 운동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관행]을 실천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시온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유대인을 자처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외부의 세력이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

흔히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유대인다움”이라는 사상으로 포장된다. “유대인다움”은 유대인의 언어와 속어를 사용하는 것, 유대인의 음식이나 음악을 즐기는 것, 유대인의 축제를 지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유대인 혐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 언어적·신체적 모욕과 차별 또는 편견 — 이다. 다른 모든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혐오도 역사상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유대인 혐오는 히틀러의 나찌가 저지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량 학살이다.

서방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은 유대인 혐오와 반시온주의의 차이를 흐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결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안 된다고 글을 쓰는 유대인이 있다면 아무런 그 사람이 유대인 혐오를 철저히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은 유대

인 혐오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온주의의 핵심적인 신념을 비판한다면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서방 지배자와 주류 언론은 사람들이 유대인 혐오를 숨기는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유대인 혐오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을 정당화한다. 자유주의 또는 좌파 단체들과 일부 무슬람들이 주로 이런 의심을 받는 두 집단이다.

여기서 기묘한 것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국가를 모두 미워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유대인 혐오의 고전적 형태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세계 정복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때로는, “시온주의자들”의 세계 지배 음모가 존재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음모론 안에 있는 유대인 혐오 사상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또는 “시온주의자들”이 미국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한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자본가들, 정부 관리들, 동맹국들과 군대들이기 때문이다.

서방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은 유대인 혐오가 이스라엘 비판 속에 숨어 있을 뿐 솔직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암시해서 유대인 혐오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책들 —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학살 등 — 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낸다.

서방 언론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을 겨냥한 적대 행위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된 유럽 식 유대인 혐오(가장 잔혹한 기록을 갖고 있는 때문인지 아니면 중동 [문제에서 비롯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우리는 이 매우 이질적인 인종차별이 융합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묘지를 더럽히려는 사람들이 반대해 행진할 때는 유대인 권력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을 때는 비방을 받거나 때로는 위협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에 계속 반대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증오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주장해야 한다.

마이클 로젠은 유대인 출신으로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BBC)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다.

이란

제국주의자들이 이란의 기층 운동을 강탈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나즈 마수미(Naz Massoumi)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나 제재 위협이 이란 국내 정치에 우려스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 출신 사회주의자인 나즈 마수미는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운동 단체 ‘액션 이란’(Action Iran)의 활동가이다.

앞으로 몇 달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이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이 정한 최종 시한이 지나고 또 다른 “부정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란 핵 문제가 다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외부 압력은 이란의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분명한 사실은 이란 개혁 운동의 지도자들이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여성들과 학생들이 주도한 강력하고 역동적인 운동 덕분에 무하마드 하타미와 개혁파가 집권할 수 있었다. 희망과 기대가 커졌고, 각종 출판물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왔고, 수많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보수파가 뒷걸음질치고 개혁 운동이 절정에 달하자 하타미는 운동을 제지했다. 이 결정적 순간에 그는 오직 문화 개혁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외국인 투자 장려를 골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지지했다.

그래서 하타미는 자신을 선출해 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보수파는 재빨리 내분을 수습하고 다시 뭉쳤다. 그 뒤 보수파의 반격이 잇달았다. 2000년 이후 많은 개혁파 신문들이 금지되고 주요 활동가들이 투옥됐다. 예컨대, 2003년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가 옥고를 치렀다.

개혁파는 정치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보수파가 강행한 숙청에 반대하며 의회에서 연좌농성도 벌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기층 운동의 지지를 받지 못해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개혁파 전략 이면의 경제 동역학을 살펴봐야 한다. 하타미의 전임자인 아크바르 하세미 라프산자니는 국유기업들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하타미는 사유화를 추진했을 뿐 아니라 민간 은행들을 도입하고 주식시장을 다시 설립해 국유기업의 정부 지분을 매각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하타미의 조치들을 지지했다.

신자유주의

그러나 라프산자니와 하타미가 추진한 경제 자유화의 이면에서 불평등과 실업이 증대하고 있었다. 이것이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그들을 괴멸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모는 소수 특권층의 지지를 받은 라프산자니는 빈민의 옹호자를 자처하는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거의 무명 인사나 다름없던 테헤란 시장이 분열한 개혁파들을 누르고 대통령직을 차지했다.

이것은 하타미와 개혁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국내에서 고립됐다고 느낀 그들은 점차 외부 지원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지금 개혁파는 훨씬 더 압력을 받고 있다.

혁명수비대 출신의 개혁파인 아크바르 간지의 사례를 보자. 그는 1998년 작가들·지식인들 피살 사건에 이란 지도자들이 연루돼 있다고 쓴 글 때문에 감옥에서 6년을 보

내야 했다. 간지의 단식 투쟁은 국제적 지지를 받았는데, 조지 W 부시도 간지의 단식 투쟁을 지지했다. 단식 투쟁중인 재소자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투여한 판타나모 수용소를 적극 옹호한 부시가 말이다.

인질

이와 비슷한 최악의 위선은 지금 팔레비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쫓겨난 이란 국왕]의 아들이 감옥 — 팔레비가 자신의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 지은 감옥 — 에 갇힌 재소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지와 에바디 같은 활동가들이 이라크 전쟁과 이란 공격 계획을 격렬하게 비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흔히 전쟁 찬성파의 인질이 되곤 한다.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혼란스런 태도들이 나타났다. 에바디는 영국의 외교 정책 연구소인 채텀하우스의 교수이자 하타미 지지자인 알리 안사리 같은 서방 인사들과 함께 서방 언론에 반전 기사를 기고해 왔다. 그러나 그 기사들은 이스라엘에 우호적이다.

그 기사들은 이란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하는데, 그 중에는 서방 열강들과 협상이나 거래, 관계 개선을 도모하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타미가 최근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난한 것은 미

국과의 관계 자체를 비판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반전 운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특정 주장들을 되풀이해서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첫째, 이스라엘과 관계를 트는 것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증동에 주둔하는 제2의 펜타곤[미국 국방부]이나 다름없는 국가다.

둘째, 우리는 이란 활동가들의 과제와 서방에 있는 우리의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 여기 영국에 있는 우리의 긴급한 과제는 미국 제국주의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미국의 공세를 지원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방의 개입이 필요 없는 독자적 운동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이란의] 보수파가 반정부 세력들을 탄압할 때 들먹이는 것이 바로 서방의 개입이다. 외국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외세에 의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장만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란의 변화는 오직 아래로부터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서방의 개입 없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란의 운동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그 운동들을 쉽사리 질식사시킬 수 있는 전쟁과 제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위협에 무조건 반대해야만 우리는 이란인들의 용감한 투쟁이 전쟁 찬성파의 로비에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⑦

사회는 어떻게 바뀌는가

존 롤리우스

지난 번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맑스의 역사이론은 생산에 집중했다. 사회가 생활필수품의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이 생산양식이다. 이 경제 토대 위에 법률·정치·종교·철학·도덕·예술 등 상부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하나의 생산양식은 어떻게 다른 생산양식으로 바뀌는가? 이것은 맑스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반자본주의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맑스가 생산의 두 측면,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구분했다는 사실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적 사회 변화의 바탕에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과 충돌이 놓여 있다.

생산력은 사회가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 즉 사회의 자원·노동·지식·기술 등이다. 예를 들어 보자. 석기시대 수렵인들의 창·활·화살, 중세 농민의 소나 말이 끄는 쟁기, 산업혁명기의 방직기와 증기기관차, 현대 산업의 생산라인·발전소·컴퓨터 등이 생산력이다.

생산관계는 사람들이 생산 과정에서 맺는 사회 관계다. 생산관계는 원시 공산주의 수렵·채집 사회의 씨족 관계에서 고대 이집트·그리스·로마의 노예 소유주와 노예, 중세의 지주와 농노·농민, 오늘날의 자본가 고용주와 임금노동자 관계까지 다양하다.

맑스는 생산력 발전 수준이 생산관계를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맷들은 봉건 영주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증기기관은 산업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생산력 증대가 결코 균등하거나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산력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인류는 더 효과적인 생산 방식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생산력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생산력은 기존 생산관제(사회의 소유관계이기도 하다)와 충돌하게 된다. 생산관계가 처음에는 생산력 증대를 뒷받침했지만, 이제는 생산력의 더한층 발전에 장애물, 즉 “족쇄”가 된다. 그러면 “사회 혁명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맑스는 말한다.

이런 모순이 시작될 때 사회 전체는 장기간의 위기에 빠저든다. 낡은 생활 방식이 더는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 낡은 사상들과 기존 제도들이 그 권위를 잃기 시작한다.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새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위기는 새로운 생산관계와 새로운 생산양식이 확립되고 사회가 전진할 수 있을 때만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전환할 때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배후에서, 이제는 세계 규모로 작동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관습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력이 존재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영양실조, 집 없는 설움에 시달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서 끝없는 충돌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고, 우리가 환경 재앙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위기는 오직 새로운 생산양식, 즉 사회주의가 확립되어야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든 과정이 기계적·필연적인 것처럼, 즉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경제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여러 이유로 맑스는 가끔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고 맑스의 진의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은 사회계급들 사이의 충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충돌

원시 공산주의 수렵·채집 사회의 종말 이래로 생산관계는 항상 계급 관계, 즉 착취와 억압의 관계였다. 한 계급(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급 —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소유주들, 봉건제에서는 지주 귀족들, 자본주의에서는 부르주아지 — 이었다. 이 계급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확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기존 질서가 그들의 권력과 특권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생산력 발전에서 비롯하는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 무대에서 우아하게 퇴장하자” 하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싸운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우리의 문명”을 지키자고 말한다.

생산력 발전은 또 특정 계급과 연결되고 그런 계급을 만들어낸다. 봉건제에서는 패뉴팩처와 상업의 성장이 신흥 부르주아지를 만들어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대적 공업이 프롤레타리아라는 노동계급을 만들어낸다. 위기의 해결과 인류의 운명은 낡은 지배계급과 신흥 계급 사이의 투쟁 결과에 달려 있다.

이 투쟁 결과는 결코 미리 예정돼 있지 않다. 유럽에서 16세기에 부르주아 혁명에 실패한 이탈리아와 독일은 3백 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그 나라들은 19세기에 가서야 국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한국까지 확장해서) 낡은 제국의 질서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억누를 수 있었고, 그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섰을 때도 여전히 심각한 빈국이었고 결국은 제국주의의 오랜 피해자가 돼야 했다. 1918~23년 독일에 서 노동자 혁명이 패배하자 스탈린과 히틀러가 떠올랐고, 이 때문에 7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어야 했다.

지배계급은 부(富)·전통·이데올로기, 특히 국가권력 등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들은 특히 피억압 계급들을 억누르는 데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 혁명적 계급의 투쟁은 경제투쟁뿐 아니라 정치투쟁, 즉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는 투쟁이어야 한다. 그 투쟁의 승리는 정치의식·동원·조직화에 달려 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우리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존 롤리우스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조지 부시와 럽스펠드는 이슬람이 '파시즘'이라고 주장한다. 무슬림 전부를 파시스트로 싸잡아 매도한다는 점말고도 이런 주장은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오늘날 프랑스의 장-마리 르펜, 인도의 쉬브 세나 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파시스트들은 단순한 극우가 아니다. 단지 혐오스런 인종차별주의자인 것만도 아니다. 단순히 소수자와 좌파에 대한 혹심한 억압과 강경한 탄압을 자행하는 권위주의자들인 것만도 아니다.

파시스트들은 민주주의를 — 자유민주주의조차 — 파괴하고,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동계급 조직을 분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들은 선거를 폐지하고 싶어하고, 사회대다수가 누려 온 자유를 전면 공격한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활동한다. 히틀러는 아우슈비츠라는 홀러코스트 공장을 지어 유대인 6백만 명을 도살했다.

파시즘은 **중간계급** 대중에 기반을 둔 독특한 정치 **운동**이었다. 물론 소수 대자본가 개인들이 파시스트 정당을 지지해 자금을 제공하곤 했다. 또, 파시스트 운동이 노동계급의 비조직 또는 주변적 인자들을 일부 포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 노동계급 운동의 상당 부분을 포섭한 적은 없다.

파시즘의 주요 지지 기반은 언제나 중간계급이었다. 중간계급은 매우 모순된 계급 지위와 사상이 그 특징이다. 그들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며 심각한 위기 때 양쪽 모두를 비난하며 오락가락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효과들 때문에 삶이 어그러지지만 그에 맞서 싸울 조직은 없는 각종 자영업자들(소기업주, 농부, 소상공인 등)과 조직되지 않은 관리직·전문직 종사자들(노조원 아닌 공무원, 다수 변호사와 의사 등)은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힘도, 대기업주들의 경제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의 인생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으로 망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대자본가를 원망하지만, 또한 노동자들도 원망한다. 특히 노동조합과 좌파를 증오한다.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에 더욱 끌린다. 이때 파시스트들이 이들의 절망을 표현하는 기치를 제공하고 이들의 분노를 돌릴 속죄양을 제시한다면 대중적 세력을 규

합할 수 있다.

파시즘 운동은 중간계급의 이러한 매우 모순된 처지와 사상의 정치적 표현이다.

그래서 모든 권위주의 정권이 파시즘인 것은 아니다. 박정희 정권도 파시즘은 아니다. 임지현 교수는 박정희의 '대중독재'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박정희는 중간계급 대중 운동을 구축하지 않았다.(새마을운동은 국가가 통제한 관치 캠페인으로, 포퓰리즘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박정희는 데마고기로 재벌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을 옹호했다. 좌파적 미사여구는커녕 일본 메이지 유신 식의 이데올로기로 통치했다. 나치당의 정식 명칭이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이고, 아우슈비츠 정문에 걸린 표어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인 것과 비교해 보라.

박정희는 또, 비록 어용이지만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 기구도 존속시켜야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허용해야 했다.

아우슈비츠

파시스트들이 중간계급 불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이 꼭 유대인일 필요는 없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독일 파시즘(나치)과 달리 유대인을 속죄양 삼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의 파시스트들은 대부분(가령 인도에서도) 오히려 무슬림을 증오한다.

그러나 모든 인종차별적 정당이 파시스트인 건 아니다. 미국 공화당은 유색인종과 무슬림을 천대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지만, 파시스트는 아니다. 공화당은 중간계급이 아니라 대자본가들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대중 운동도 아니다.

또한, 모든 민족주의 정치세력이 파시스트인 것도 아니다. 2005년 봄 다양한 아나키스트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난한 민주노동당 내 좌파 민족주의자들을 파시스트로 매도했는데, 노동계급 정당 또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거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염원하는 좌파 지식인들이 나치와 비슷한 성격의 세력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파시즘이라는 생각도 터무니없다. 이슬람주의(정치적 급진주의 이슬람)에 한정해 살펴보면라도 헤즈볼라나 하마스 등을 히틀러나 무솔리니에 빗대는 건 아무래도 우습다. (더 자세한 논의는 7면에 실린 아닌디야 바타차리야의 글을 보시오.)

최일봉

9월 16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 운집한 오브라도르 지지 시위대

다른 멕시코는 가능하다

9월 16일 토요일 멕시코의 시민 저항 운동은 선거부정 항의 투쟁의 일환으로 첫번째 전국민주주의대회를 열었다.

그 대회에는 1백만 명이 참가했고, 멕시코 전역에서 선출된 2만 5천7백24명의 대표들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멕시코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지명했다.

또, 그 대회는 7월 2일 대선에서 오브라도르가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오는 11월 20일[1910년 멕시코 혁명 기념일]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데 동의했다.

작가이자 활동가인 엘레나 포니아토우스카는 개회사에서 멕시코 헌법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행동한다면 국민들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교체할 수 있는 명백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대회는 대표들에게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브라도르를 합법적 대통령, 즉 시민 저항운동의 지도자로 승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대통령, 대통령”을 연호하며 “오브라도르에게 경의를!”이라고 외쳤다.

그 뒤 그들은 펠리페 칼데론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특권 체제의 폐지를 선언했다. 그리

고 내각을 인선하고 멕시코시티에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오브라도르에게 부여했다.

그들은 기본적인 정책 강령들을 투표로 선정했다. 그 중에는 빈곤·불평등·사유화에 맞서 싸우고, 오직 극소수 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멕시코의 제도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또, 그들은 시민 저항을 계속하기 위한 광범한 행동 강령들에도 동의했다. 그 중에는 칼데론이 가는 곳마다 항의 시위 벌이기, 문화제 행사들 조직하기, 월마트·코카콜라·사브리타스·빔보·킴벌리-클라크 등 칼데론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오브라도르를 비방하는 ‘더러운 선거운동’을 지원한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들은 운동의 모든 노력을 12월 1일에 집중하자고 호소했다. 그 날은 칼데론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로 예정된 날이다.

미래

운동은 전국민주주의대회를 몇 주 동안 준비해 왔고, 치아파스와 오악사카에서 티후아나와 몬테레이까지 멕시코의 모든 주(州)에서 선출된 오브라도르 지지자들

의 대표단이 멕시코시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노동자들·학생들·원주민들이 모두 모여 멕시코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로서 멕시코가 스페인에서 독립한 것을 축하하는 독립 기념일인 주말에 열린 그 대회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전통적으로 그 날은 대통령이 멕시코시티의 중앙 광장에 있는 시(市)궁전에서 ‘독립의 외침’을 선언한다.[1810년 이달고 신부가 멕시코의 독립을 선언한 것을 재연하는 행사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통령 폭스가 자신의 고향인 파나후아토 주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했고, 소칼로 광장에서는 민주혁명당(PRD) 소속 멕시코시티 시장이 ‘독립의 외침’을 선언했다.

이미 9월 1일에도 폭스 — 이제 ‘민주주의의 배신자’로 유명해진 — 는 PRD 소속 하원의원들의 저지 때문에 ‘대국민 연설’을 하지 못했다.

멕시코의 노동계급·원주민들·빈민들에 의해 새 정부가 민주적으로 구성된 뒤 대표단은 다른 멕시코가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결의에 찬 모습으로 대회장을 떠났다.

데비 잭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영국 출신 사회주의자)

일본의 핵무장을 꿈꾸는 아베 신조

한승동 <한겨레> 선임기자는 주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 관한 글을 써왔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 줬 왔다. 그에게 일본 총리 선거에서 당선인 유력한 아베 신조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들어봤다.



총리 선거에서 당선인 유력해 보이는 아베 신조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베 신조는 전직 외상 아베 신파로의 아들이고 전직 총리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대표적 전범인 도조 히데끼의 측근으로 일본의 전쟁 수행에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 사람입니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세웠는데, 그 만주국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바로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나중에 총리가 돼 '1955년 체제'라는 보수 합동체제를 만들었고 현재 자민당 체제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죠. 기시 노부스케의 정신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일본의 대동아 전쟁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는 이런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총리 후보로 떠오른 것은 바로 북한 문제 덕분입니다. 2002년 고이즈미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아베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자백하지 않으면 조일 평양선언을 하지 말라고 고이즈미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 문제를 인정했는데도 그 뒤 과정은 평양선언 이행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 압박 강화로 이어졌죠. 이런 대북 강경론에 가장 앞장 선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는 자위대 해외 파병을 위한 '항구법' 제정, 해외에서 '집단 안보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일본 재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패전 이후 만든 평화헌법대로라면 일본은 군대를 가져서도 안 되고 타국과 싸워서도 안 되죠. 그런데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입니다. 그 동안 일본은 각종 특별법을 만들고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위대 파병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1996년에 미국은 미일 안보 재해석을 통해 자위대와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했고,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이것이 더욱 강화되죠.

평화헌법 상 일본은 전수방위(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오직 영토방위만 할 수 있는 것)만 허용되는데, 9·11 이후 이것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일본은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라며 파병을 정당화합니다. 이라크 사마라에 파병하고 인도양에

자위대 함정을 보내 미군 물자 수송을 도와 주고 있죠. 현 헌법대로 하면 자위대는 전투지역에는 못 가지만 이라크 [사마라] '후방'이라는 식으로 해석하지요. 후방 지원 논리는 '주변사태법'에도 나타나는데 이 법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벌어질 때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 지원 임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 보수 세력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지금 일본이 추진하려는 여러 특별법들은 그 전 단계인 것입니다. 즉, 일본이 지금까지의 전수방위 체제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글로벌 체제, 세계 전략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미일동맹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군사적으로는 '일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미국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의 자마 기지로 옮기고, 요코다 기지의 공군 자위대 사령부를 같이 쓰는 식이죠. 미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두 나라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입니다. 경제 성장 속도도 빠르고 잠재력도 커서 2015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을 능가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의 등장을] 더 두려워하는 쪽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아시아 냉전 동맹국으로 성장하면서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등을 거의 안방처럼 휘젓고 다닐 수 있었는데, 중국의 등장은 그것을 저해하죠.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한국이 커지면 일본의 절대적 우위가 사라집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커지니까 일본에 유리해진 면이 있지만, 세계 시장 전체에서는 일본의 몫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모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단독으로 대응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아베 신조 같은 사람들은 강력하게 미국과 동맹을 추진합니다. 미일동맹 체제는 중국·북한을 포함해 장차 있을지도 모를 통일 한국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일본 우익 단체

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은 일본이 군대를 정식으로 보유하고, 해외 파병도 마음대로 하고, 집단적 자위권으로 동맹국들과 작전할 수 있게 하려 하는데, 이건 아베 신조 같은 우파 리더들 생각과 똑같잖습니까?

한편, 그렇게 하려면 구실이 필요합니다. 일본 여론을 바꾸기 위해 '안보상 위협'을 만들어야 하죠. 그게 북한입니다. 사실 북한의 마시일이나 핵은 미국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왜 북한위협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안보상 위협'을 만들어내서 군비를 증강하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죠.

아베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아베가 총리가 되면 고이즈미가 평양을 두 번이나 갔던 것처럼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대테러법' 같은 강경책을 택할 가능성이 더 큼니다. 아베 신조와 같은 우파적 매파들은 북한위협론을 이용해 중국에 대응하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하게 협력해 일본의 정치·군사적 지위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 애쓰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유사동맹인 한국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베는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한국과도 이런 데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아베는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목적은 일본을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맹방으로 육성하려는 뜻도 있지만 일본을 자신의 통제 아래 묶어 두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측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올 테고 남북한이 핵 무장을 하면 일본도 당연히 핵무장을 하려 하겠죠. 이렇게 되면 중국도 핵군비를 강화할 것이고 그러면 대만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면 미국의 핵 독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를 통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정제된 플루토늄 보유량이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재처리 시설도 가지고 있고요. 또, H2A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방향만 바꾸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이죠. 핵 폭탄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일본이 단독으로 핵무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남북한에서 핵무장 여론이 나오면 일본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베는 5년 안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헌법 9조 개정, 즉 군대 보유, 타국과의 전쟁,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는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죠. 지금 자민당이 개헌 국민투표 등 개헌 작업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준비하려는 거죠.

자민당은 개헌안 준비를 다 마쳤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은 잡탕이에요. 자민당이 1993년에 정권을 잃었는데 이 때는 일본이 본격적 불황으로 들어가는 시기였고 냉전 붕괴도 한몫 했죠. 리쿠르트 사건 등 부패 사건 터지고 급기야 분열해 버렸죠. 이 때 자민당에서 뛰쳐나온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 민주당은 자민당과 색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오자와 나자민당이 구상하는 것이 보수 양당 체제입니다. 좌파를 쫓아내고 보수당끼리 돌려 먹기를 하자는 거죠.

5년 안에 개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2당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만큼 상당한 세력이던 사회당이 1980년대 말 소련이 무너지자 몰락해 지금 의석이 6석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시민단체의 저항과 외부의 압박인데, 외부 압박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미국이 [개헌을] 하라고 하니까요.

결국, 일본의 우경화나 미일동맹의 강화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나 세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태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새로운 대안세계를 생각해 내고 닥쳐오는 당장의 위협에 과감히 저항해야 합니다.

인터뷰 · 정리 한규한

방문취업제 논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법무부와 노동부가 25세 이상 중국·옛소련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방문취업제는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기간중 자유왕래 허용, 취업 가능 업종 확대, 취업 절차 간소화, 작업장 이동 자유화가 그 핵심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중국과 옛소련 지역 동포들인 '단순노무'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재외동포법 적용을 배제하고 고용허가제를 적용해 왔다.

3년으로 제한된 체류 기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취업 절차와 작업장 이동 금지 등 때문에 중국과 옛소련 동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전체 18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자' 중 약 19퍼센트(3만 5천여 명)가 중국 국적 동포들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방문취업제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이다.

아마도 정부는 방문취업제를 추진해서 동포 차별 논란을 피하고, 이왕이면 생김새와 언어가 같은 중국 국적 동포들을 받아들이며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주자 1백만 시대(현재 82만 명)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는 주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중국·옛소련 지역 동포들을 재미·재일 등 다른 동포들과 여전히 차별한다.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취업 업종도 제한하고,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들의 입국을 조절(=통제)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건설연맹

한편, 건설연맹 지도부는 재외동포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저임금을 부추기고 노조 파괴 공작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력 도입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방문취업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건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건설업주들이 임금이 싼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 이윤을 만회하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 3월 여수산업단지의 GS칼텍스를 비롯한 34개 원청사의 노조 간부 현장 출입 통제, 블랙리스트 작성, 이주노동자 3천 명 고용 계획이 폭로된 바 있으므로, 건설노조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다.

건설 현장에 20만 명의 외국 인력이 있고 그 중 90퍼센트 이상이 재외동포라는 건설연맹 지도부의 발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전체 건설노동자의 4퍼센트(8만여 명)밖에 안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말은 과장이다.

저임금 문제도 이주노동자들이 원인이 아니라 건설업 경기의 부진으로 이윤을 만회하려는 사장들의 임금 인상 거부 때문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여수산업단의 건설사 대책회의에서 보듯이, 기업주들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2004년 1월 임금 체불에 맞서 투쟁하는 조선족과 한국인 노동자들 — 연대의 힘으로 승리했다

탄압하기 위해 건설 부문에서 98퍼센트가 넘는 미조직 한국 노동자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을 노조 무력화와 파업 파괴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간 평균 60.7시간을 뺄까지게 일하며 겨우 월 평균 임금 1백13만 원을 받고 그마저 70퍼센트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을 나가라고 배척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이라는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물론 건설연맹 지도부가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재외동포들의 임금체불과 산재 해결, 4대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인력 도입 반대를 외치는 것은 그 연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건설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동료로 적극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싸울 때, 기업주들의 비열한 책략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줄 수 있다.

조승희

시장 논리의 교육 침투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

전교조의 교사 성과급 반납 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부분적으로 도입된 '성과급'은 IMF 경제 위기 때문에 유보됐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2001년 모든 교사에게 차등 지급됐다.

당시 성과급 반납 투쟁으로 성과급 총액의 10퍼센트만 차등 지급하고 그 기준도 경력 순으로 바꿈으로써 독소적 성격이 거의 제거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교사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6년 8월 차등지급률을 20퍼센트로 확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성과급 반납 행동으로 조직했다. 9월 13일 현재 전국의 조합원·비조합원 8만 2백8명이 무려 7백58억 원을 반납했다.

전교조는 9월 14일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취합된 성과급 반납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수령을 거부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반납을 시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급 반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월 15일을 전후해 차등 성과급 2차 지급 계획을 학교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2차 성과급 반납 행동이 촉발될 것 같다.

한편 교육부는 9월 말 교원평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10~12월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에 성과급 폐기, 교원평가제 저지, 한미FTA 저지, 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골적인 시장 논리가 전면으로 교육에 침투해 오는 것에 맞서 전면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 투쟁이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혁(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행자부장관 퇴진하라

지난 9월 4일 행자부는 광역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9월 22일까지 전국 2백57개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행자부는 노조사무실 폐쇄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과 함께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지어 종로지부 지부장 선거에 2004

년 파업으로 파면된 사람들이 출마했다고 선거를 방해해 무산시켜 버렸다.

이런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9월 9일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5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이용섭 행자부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9월 12일 단식농성에 돌입한 권승복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사수하는 투쟁에 전면으로 나서 9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투쟁의 의지

를 다졌다.

현재 각 지역본부와 지부는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 노조사무실 폐쇄 반대 1인 시위,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단호한

정말이지 이용섭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할 강력하고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한편, 9월 4일 행자부가 노조사무실 폐쇄를 명령할 때, 공무원노총(공노총)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전투적 노동운동을 비판"하며 정부의 특별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노총 인천시지부는 창립출범식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합류했고,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어디 있는지 보여 주었다.

최영준

‘파업은 어렵게, 해고는 쉽게’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철회하라

더러운 ‘9·11 노사정 야합’이라는 테
러가 노동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번
야합은 노동기본권을 산산이 박살내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는 삼성, 포
스코, 어용노조, 우파노조 아래서 신음해
온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민
주노조 건설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

항공, 혈액, 폐·하수처리, 증기·온수
공급업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
하고 직권중재 폐지 대신 대체근로를 허
용한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서 파
업권을 빼앗은 것이다. 특히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파업을 무력화하는 대체
근로를 도입한 것은 완전한 조삼모사다.

무엇보다 이번 야합의 핵심은 노동부
장관 이상수가 자랑했듯이 “해고의 유연
성을 확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부당해고 후 금전보상 허용’과
‘부당해고시 벌칙조항 삭제’,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그것이다. 더 손쉽게 정리해고하고, 멋대
로 부당해고를 자행하거나 돈으로 매우
도록 해 준 것이다.

이처럼 ‘파업은 어렵게, 해고는 쉽게’
하는 것이 노무현이 추진해 온 노사관계
로드맵의 본질이었다. 애당초 노무현에
게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것은 껌데기였
을 뿐이다.

공무원·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문제는 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
했고, 보다시피 공무원노동자를 막가파
식으로 탄압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

자 문제는 ‘준근로자’에서 ‘유사근로자’
로 후퇴하더니 결국 ‘자영업자’로 정리해
버렸다.

이 쓰레기 같은 야합에 한국노총 이용
득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용득은 한국노
총 상층 관료들의 기득권을 위해 기층 노
동자들의 기본권과 고용안정을 팔아먹는
배신을 저질렀다.

이런 자가 <조선일보>에 글까지 써서
민주노총에게 “전부 아니면 전무식 노동
운동을 그만하라”고 한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이 자에게는 노조 관료를 위한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금지만이 ‘전부’
였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전무’가 돼도
알 바 아니었다. 사실 전임자 임금은 거

래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결정을 위해 노
동기본권과 결합해서 싸울 문제였다.

쓰레기

‘9·11 노사정 야합’ 직후에 분노한 일
부 노동자들에게 받은 손찌검은, 이용득
이 저지른 죄에 비해 한참 모자란 응징이
었다. 이용득과 배신자들은 영원한 죄인
으로 기록돼야 하고 한국노총 조합원들
에게서 불신임받아 마땅하다.

반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야합을
비판하고 투쟁을 선언한 것은 옳은 일이
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사회
의가 … 허구적 대화 틀임을 확인하게 되

었다”고 했다.

사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비정규직 개
악안 때 노사정 협상에 들러리서다가 한
국노총 지도부에게 배신당하고 노무현에
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을 통해 배웠어야
했다.

이제는 ‘사회적 교섭’ 지지자들마저도
“괜한 들러리만 섰구나”, “투쟁과 교섭
은 병행됐는가”라고 한탄하고 있다. 여
기서 교섭보다 투쟁 건설이 중심이라는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이제부터는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투
쟁의 한 길로 나서야 한다. 야합 내용이
국회로 넘어가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하
면 “1996년 노개투처럼 파업을 벌이지
않는 이상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다.”(<매
일노동뉴스> 9월 12일치) 로드맵을 막아
내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사관계 민
주화 8대 과제’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강력한 투쟁력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정말이지 이 투쟁 속에서 누가
걸으려는 노무현과 이용득을 욕하면서,
속으로는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로 좋아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로드맵은 일부가 말하듯이 ‘대기업 노
조는 속으로 좋아할’ 내용이 결코 아니
다. ‘파업은 어렵게, 해고는 쉽게’라는 로
드맵의 핵심 내용은 전체 노동자들과 특
히 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
서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이
투쟁에 앞장서야 하고, 현장 활동가들은
모두 이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전지윤

기아차 연대의 확산과 단호한 투쟁이 중요하다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지회 투쟁이 3
개월을 넘기며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비정
규직 노동자들은 원·하청 사측과 심지어 우
파 현장조직인 17대 전 지부장 정상재의 ‘조
합원과 함께’의 탄압까지 이겨내고 곳곳이 파
업을 벌여 왔다.

비정규직 지회와 정규직 활동가들은 연대
의 끈을 더욱 단단히 동여매고 투쟁의 승리를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

연대 투쟁에 밀린 기아 사측은 식당 파업
권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버티다 식당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자 이틀 만에 파업
권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합의했다.

별도합의서에 ‘쟁의기간 중에도 정상적 급
식 유지 노력’이 들어있는 것은 아쉽지만 정
규직노조 집행부까지 파업권을 부정하는 상
황에서 체결된 단협이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 9월 12일에는 비정규직 지회와 정규
직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아 노동
자 문화제가 1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연대 동
지들이 모여서 힘차게 열렸다. 문화제에는 율
동패, 민중가수, 민주노동당 분회, ‘다함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등이 참가했지만 안타
깝게도 기아차 정규직노조 집행부는 없었다.

지회는 이러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9월
18일 전면 파업 돌입을 경고했고 기아 원청
사측은 결국 교섭테이블에 나오겠다고 약속
해야 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2주간 파업을 중
단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지도부가 사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굴욕적인 잠정합의
를 해서 연대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하지만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는 이 잘못된
합의를 비판하며 더 단호하고 강력한 연대 투
쟁을 현대차 동지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기만적인 잠정합의를
떨쳐버리고 연대 투쟁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9월 19일에는 우파 정상재 세력과 감독자
협의회 등이 나서서 파업 파괴 집회를 개최하
려한다. 비정규직 지회 투쟁의 또 다른 분수
령이 될 것이 분명한 집회다. 정상재와 우파
들의 준동에 맞서 지회 투쟁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활동가들이 더욱 강력한 연대 집
회를 조직해 단호히 맞불을 놓아야 한다.

김우용(기아차 정규직 활동가)

현대차 기만적 합의를 거부하고 투쟁을 선언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사들이 사측과 지
도부의 기만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새로
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파업이 일부 공장을 멈추는
일이 계속되자 사측은 대체인력과 구사
대 투입, 고소·고발, 해고, 손배 등 탄
압을 가하는 한편, 일단 파업을 멈추고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비정규직노조 지
도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난 2
주간 파업은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2주간 비정규직노조 지도
부를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여 발목을 잡아
놓고, 사측은 파업 파괴 공작에 몰두했다.
구사대를 모집했고, 원청 관리자들을 소
집해 파업 파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개별 면담을 통한 회유와 협박도 했다.

현재 고소·고발된 비정규직 노동자
들은 46명이고, 손배가압류 대상도 34
명이다. 정규직노조 지도부는 이런 탄압
을 방관했고 되려 비정규직 지도부에 타
협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5일 비정규직노
조 박현재 위원장은 사측과 기만적 잠

정합의를 해버렸다. 합의안은 손배, 고
소·고발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이 빠져
있고 임금 인상액도 법정 최저임금 인상
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2·3차
하청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다.

이 기만적 합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은 크게 낙담했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
다. 하지만 다행히도 혼란은 오래 가지
않았다. 비정규직 현장위원장들과 투사들
은 금세 기만적 합의를 한 지도부를 사
퇴시키고,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구성해
전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을 고무하기보다는 억
누르는 구실을 해 온 정규직 박유기 지
도부가 이제라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운동의 비판
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의원, 소위원, 현장조직 활동가들도 다
가오는 비정규직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남문수 열
사가 보여 주듯 비정규직 탄압은 결국 정규
직에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활동가)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외대

학교와 우파 총학생회의 입지가 좁아지다

학교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조명훈 동지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외대 당국이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학교는 첫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8월 11일에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다.

뽀뽀스립게도 총무처장은 고소 이유를 묻는 조명훈 동지에게, 보직교수들의 폭력·성희롱 비판 대자보를 부착한 것을 이유로 자신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조명훈 동지가 폭로한 것을 상기시키며 “당신이 고소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

학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없다”고 발뽀했지만 애초 징계이든 고소이든 학교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게 목적이었다.

대자보 부착을 이유로 학생을 고소한 초유의 사태가 알려지자 학교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미 외대학생 8천 명 중 1천 명 이상이 징계 철회 서

명에 동참했다. 학생처장은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한 학생과 면담에서 “사과라는 말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 그 날 행동이 경솔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고 말하며 곤혹스러워 했다.

하지만 조명훈 동지는 약 50명이 참가한 15일의 징계·고소 철회 집회에서 학교 측 회유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우파 총학생회는 지난 4월에 자행한 파업 농성장 침탈을 9월 15일 다시 반복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총무처장과 학생처장 등은 “불법 점거물을 학생들이 철거하는 것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며 침탈을 방조했지만 철거에 가담한 학생들 중에는 “교수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즐기치게 흥보한 이 날 파업반대 집회엔 총학생

9월 15일 집회에 참석한 조명훈 동지

회 간부 10여 명을 포함해 겨우 열다섯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들이 예정한 집회조차 못하고 축 처진 채 노조 농성장으로 이동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노조가 이에 대응하는 집회를 조직했더라면 이들은 농성장 철거는커녕 꿈무늬를 빼야 했을 것이다.

징계 철회 투쟁은 학교와 우파 총학생회의 입지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다. 조명훈 동지를 비롯한 외대의 진보적 학생들은 이런 투쟁의 성과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송주

경성대

부패 총학생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산 경성대 총학생회장 송완준은 지난해 12월 선거 운동 중 한 이벤트 업체한테서 선거자금 70만 원을 받았고 새터 조직 과정에서 2백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대동제 등 행사 세 개를 독점계약하는 조건이었는데 뒤늦게 학내 언론사가 이를 폭로했다.

이에 ‘다함께’ 경성대모임은 총학생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문과대와 동아리연합회가 한 설문조사에서 80퍼센트 가까운 학생들

이 총학생회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바란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며칠 뒤 학교 곳곳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그 내용은 “학내 언론사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다”, “다함께는 반민주주의 단체”, “대부분이 정치적 음모”라는 것이었고 사퇴하겠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학생들이 총학생회장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사과’에 분노하고 있다.

한편, ‘다함께’ 경성대모임이 단호

하게 사퇴를 요구하며 여론화한 결과, 1주일이 채 안 돼 문과대 학생회 등이 참여해 ‘부패 총학생회장 사퇴 촉구! 학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위’를 만들었다. 대책위는 다음 주 초에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 활동하기로 했으며 더 많은 개인과 단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총학생회장이 사퇴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강민선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서울 남부
중동의 위기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9월 20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성공회대 새천년관 7208호
문의 : 010-2752-2003
참가비 : 2천 원

한미FTA —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9월 21일(목) 오후 6시
장소 : 이부대 104호
문의 : 010-3122-1905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9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인문과학관 509호
문의 : 011-9937-1755

고려대
신자유주의 —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9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문과대(서관) 317호
문의 : 010-3181-5032

연세대
9월 20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위당관 205호
문의 : 017-362-7077

성균관대
9월 27일(수) 오후 6시
문의 : 010-6689-0080

이화여대
9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 : 010-2263-1106

시립대 / 중동의 평화는 가능한가?
9월 21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전농관 308호
문의 : 011-9347-1075

교대
시장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가?
9월 26일(화) 오후 6시
문의 : 010-3163-1673

외대

한미FTA —

남부지역 사회포럼

‘신자유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9월 27일(수) 오후 8시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6495-9925

강탈국가 이스라엘 : 시온주의와 제국주의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운동의 확대를 위하여

김인식

9월 14일에 열린 ‘한미FTA 저지 범국본’ 전략 토론회에서 이해영 교수는 3차 협상을 이렇게 평가했다.

“본격적인 주고받기 게임이 될 것이라던 3차 본협상이 맥없이 끝났다. … 이나마 강력한 반대 진영과 여론이 없었다면 거의 가능하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이해영 교수가 한미FTA 협상 전망에서 반대 운동과 여론을 주요 변수로 주목한 것은 옳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정부가 한미FTA를 이대로 강행하면 6월항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은 FTA 반대 정서가 얼마나 큰지를 힐끗 보여 준다.

반대 운동과 여론이 만만치 않자 일부 정치인들은 운동을 대미 협상력 제고에 이용하고 싶어한다. 김근태는 “지금의 한미FTA 반대 운동이 한국의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손학규도 “농민들의 반대 운동이 반드시 협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이들은 음흉한 책략을 부리고 있다. 약삭빠르게 FTA 반대 운동에 한 다리를 걸치는 한편, 운동을 협상 압력 수단으로 제한하고 싶어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이 커다란 반신자유주의 결집을 이뤄내고 있지만 FTA를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더한층 거대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핵심인 데다, 한국 자본주의에는 신자유주의적 개방 말고는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노무현 정부가 인간한 반대에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말고도 ‘자발적’ 자유화 — 민간 기업에게 가스 도입권 허용 등 — 를 통해 신자유주의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가 명운을 건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3차 협상 직후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이 미국 재계 인사들에게 “한미FTA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확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신자유주의 결집의 계기인 한미FTA 반대 운동으로 최대한 집결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의 팽창 속도와 규모에 따라 정부의 이러저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힘도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의 폭 넓히기

지금 열우당 내부에서조차 노무현의 한미FTA 추진에 질겁하는 의원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정부 정책을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운동에 새로운 목소리를 보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사태 전개다. 이것은 광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운동을 더한층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되면 노무현의 정책을 중단시킬 만큼 충분한 압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평통사’ 등 일부 좌파들이 제기하는 “노무현 퇴진, 열우당 해체” 요구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지, 운동에 참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서는 곤란하다. 불필요하게 쟁점을 확대하거나 다른 쟁점들로 돌리는 시도는 오히려 운동에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물론 이 단체들이 초기부터 투쟁했고 애착을 갖고 운동을 건설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한때 우리 운동을 반대했거나 우리의 목표를 의심했지만 이제 FTA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새로운 지지자들을 되도록 광범하게 운동의 대열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매우 분명하게 제한된 쟁점들 — 한미FTA 반대 — 주위로 다양한 정치 경향의 사람들을 불러모아 운동을 되도록 광범하게 건설함으로써 FTA를 추진하는 노무현을 가련한 소수파로 만들 수 있을 때 “노무현 퇴진”이 정서를 넘어 구체적 요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저지 운동에 헌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7월 12일 한미FTA 저지 시위

것은 운동에 긍정적 구실을 할 것이다. FTA 저지 운동 건설을 통해 지방선거 후 침체해 있는 당 분위기를 “혁신”하겠다는 것도 좋은 징조다.(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 중 FTA 반대에만 주력하고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과 이라크 파병 — 열우당 대변인 이상호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괴로”웠고 “두고두고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실토한 — 은 소홀히 여긴다면 노무현의 전쟁 정책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을 제대로 당으로 끌어당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제안은 시기상 부적절하다. 다른 단체들과 조율 없이 당이 언론에 발표하는 바람에 운동에 혼선을 빚은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자칫 운동에 자율주의적 조직 방식 — 힘을 집중하기보다 단체들마다 선호하는 것을 알아서 하기 — 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한미FTA를 폭로하고 반대 운동 건설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민투표 여부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전선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투표 전술을 거둬들이는 것이 운동의 협력과 힘의 집중을 위하는 일이다.

한미FTA와 안보 맞바꾸기?

한미FTA 반대 운동에는 한미FTA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원하는 노무현의 선물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분석의 오류는 잘못된 예측으로 이어졌다. 이를테면, 한미정상회담과 시기적으로 겹쳐 있는 한미FTA 3차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한미FTA)를 내주고 안보(미국의 대북 정책 변경)를 챙기려 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 그런 경우다.

또, 한미FTA 3차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북핵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

문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런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먼저,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자본가의 경제적 이익을 미국에 넘겨줄 것이라는 생각은 두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경쟁을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 두 국가는 안보에서도 협력과 경쟁을 오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심 대외 정책인 이라크 점령을 적극 지원하지만 대북 정책에서는 견해 충돌이

찾다. 이런 모순 때문에 한국 지배계급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생겨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지배계급 내부에서 1991년 옛 소련 블록의 해체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세계 체제의 정치적·경제적 다극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분파들이 생겨났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으로 말해, 경제와 안보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지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배 전략이므로), 동시에 그 둘의

관계가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모순을 빚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을 거대한 잠재적 시장으로 여긴다. 또, 중국은 미국의 주요 채권국 중 하나다. 그와 동시에,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이 세계 규모에서 미국의 경쟁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는 그런 우려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 정책은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경쟁 사이에서 동요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한미FTA 추진 동기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적·경제적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협소하다.

대만

1백만 명이 천수이벤 퇴진을 요구하다

[편집자] 지난 9월 15일 대만에서는 천수이벤 총통 사퇴 요구 집회에 1백만 명이 참가했다. 직접적 원인은 지난 5월 폭로된 천수이벤 가족들의 부패지만, 그 밑바탕에는 최근 대만의 변화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많은 자본가와 우파 정치인들은 천 정부가 중국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반면, 노동자들은 천수이벤 정부가 '깨끗한 정치'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업 살리기'를 위해 노동유연화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래서 운동의 일부가 천수이벤 사퇴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을 호소했을 때 국민당과 자본가들뿐 아니라 운동 지도부인 '1백만 인민 반부패 운동본부'의 상당수 지도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천수이벤을 사퇴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 투쟁이다. 파업 투쟁을 통해 운동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줄 것이고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 이후 침체했던 대만 노동계급 투쟁이 다시 전투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아래 글은 최근 대만 정치 상황에 대해서 대만의 제4인터내셔널 경향 좌파 단체인 '노동자민주'의 지도자 양웨이중이 <맞불>에 보내 온 글이다.

9월 12일 타이베이 총통 관저 앞에서 천수이벤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천수이벤의 부패 문제를 겨냥한 크고 작은 대중운동이 [지난 5월부터] 몇 차례 있었으나 이 운동들은 지금 규모로까지 발전할 수 없었다.

국민당이 주도하는 '청색진영'[국민당이 주도하는 정치세력 연합]이 대중운동을 두려워해 운동을 철두철미하게 이끌지 못했고 그들의 운동이 민진당 지지자나 중간파를 끌어들이지 못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민당은 당의 주요 역량을 [천수이벤] 탄핵이나 내각 해산에 두었는데, 국회 안 힘의 균형[국민당의 '청색진영'과 민진당의 '녹색진영'(민진당이 주도하는 정치세력 연합)] 사이의 의석수 차이 때문에 이것은 성공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천수이벤 퇴진 문제에 대해 국민당이 느긋한 것은 자신들이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국민당이 지금 내각 해산이나 천수이벤 퇴진을 추진하면 정국 불안을 낳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당 일부 세력과 [대만] 독립주장파[녹색진영]를 결합시켜 '청색진영'의 힘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비(非)청색진영이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대중 사이에서 명망이 없는 데다 역량도 부족해서 운동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최근 스밍더[전 민진당 주석] 등이 대중 동원을 호소하고 나서야 정세가 변했다.

'1백만 인민 반부패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주요 간부들은 대부분 노련한 민진당 당원들이다. 또, 운동본부는 의사나 변호사, 문화계 인사들을 내세워 중간계급 색채

를 띠려고 노력해 온건한 대중에게도 흡인력이 있다.

게다가 민진당 주류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천수이벤을 옹호하고, 졸렬한 인신공격으로 스밍더를 비방해서 도리어 더 수세에 몰렸다. 그래서 9월 9일[의 대규모 시위] 이래 천수이벤 퇴진 운동의 대중적 기초가 더욱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운동의 대중적 기초가 도시 상업·서비스업·공공부문 노동자 등 피고용자들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종 자신을 중간계급으로 여기지만 객관적으로 노동계급에 속한다. 또, 흔히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여겨진 여성과 청년의 참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여성과 청년

그러나 대중은 한편으로 상당한 열정과 활력을 가진 반면 운동 지도부를 철저히 추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대만의 정치·사회·경제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의식은 아직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스밍더 등의 지도자들은 대중이 통치자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고, 비록 모호하지만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불만을 잘 이끌지 않는다면 급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중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려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노동자] 총파업을 주장했을 때 그들은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기층 조직화, 선전과 교육, 각종 파업 물자의 준비, 지배자들과 국가의 탄압 등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에 관한 토론 등 파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스밍더 등의 진정한 계획은 대중운동을 이끌어낸 후 그것을 철저히 통제해 협상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천수이벤 퇴진 이후 상층 권력구조·정당의 재개편, 또는 정치제도의 변화(예컨대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거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를 얻기 위해 뒷거래를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 좌파는 현재의 정세에 직면해 몇 가지 중요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먼저, 천수이벤 퇴진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노동대중에게 득이 되는 개혁을 추진하려고 요구해야 한다. 또, 운동 지도부의 보수성을 폭로하고 비민주성을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중은 작업장·학교 등을 단위로 운동 동원의 목표·개혁강령·행동방침을 토론해야 한다. 또한 운동이 [타이베이를 넘어] 더 많은 지역으로 연결돼야 한다.

구체적인 행동에서 운동본부는 총파업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각 도시에서 대중운동을 추진하려 한다. 우리는 적극 개입해서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진행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타이베이 이외에 운동본부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각종 조직화 활동을 전개해 대중운동이 자주적으로 발전하도록 돕고 이것을 수도에서 벌어질 총력전으로 응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번역 한은솔

